

# 국무조정실

우110-760 / 종로구 세종로77-6 / 전화 738-2857 (행) 3892, 3889 / 전송 738-2859

복지노동심의관실

과장 정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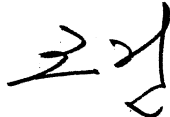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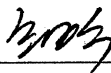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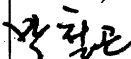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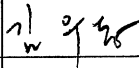
서기관 김우동

문서번호 국무사회 65109-40

시행일자 2003. 5. 23 ( )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보존기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 개		
조정관			
심의관			
과 장			
기안자			
심사자		심 사 일	<div>협조</div>

## 제목 공무원 집단행동 중지 및 엄정대처 지시(국무총리 지시 2003- 7 호)

1. 참여정부는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 허용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전향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공무원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전향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3. 정부에서는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부 공무원들의 투표소 설치 등의 불법 집단행동 기도에 대하여 수차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투표소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력 등을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각급 기관장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의 자제를 적극 설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걸쳐 불법적인 투표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4. 더욱이 최근 사회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집단행동이 빈발함에 따라 국가 사회기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국민복을 위한 최일선의 책병이자 국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공무원 여러분들까지 스스로 국법질서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데 대하여 국민 그 누구도 여러분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단행동을 기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지금 즉시 이를 중지하고 투표  
소를 자진 철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자세를  
저버리고 국법질서를 뿌리채 흔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은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즉시 복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5.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은  
소속공무원들이 스스로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도록 한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  
울여 주시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급 자치단체의 추진 노력을 독려·지원·평  
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해 나가카 바랍니다.~~

6. 아울러, 각급 기관의 장 및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찬반투표행위를 주도한  
자, 적극 선동한자 등에 대해서 공직기강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의법조치  
함으로써 법질서를 무시하고 불법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  
도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01~가11, 가21~31, 가41~가58, 가71~가86, 나 01~18